

원자력안전기술원, 한빛원전 운영변경 허가 보고서 부실 논란

전문가들 “전열관 파손·전원 상실 등 평가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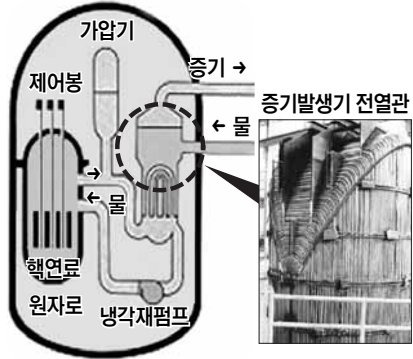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을 제한치 상향조정 근거 마련 주민 안전위해 재검증 지적

한빛원전 3·4호기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사항’(증기발생기 관막을 제한치 상향조정) 수용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원자력 전문가들에서 제기됐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을 8~18% 상향하는 것을 규제기관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술검증 ‘경수로 심사 지침’ 가운데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한 채 수행됐지만 안전성에는 영향을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빛 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사항 기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 안전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평가절차(10항)를 누락한 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 개략도



해당 규정은 ‘원전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깨지고 소의전원 상실과 대가방출밸브가 고착화된 상태(사고)’에서의 방사성 물질 누출, 냉각재 고갈 여부 등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설계와 정비 경험이 있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은 원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대한 사고를 가정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원전 주민들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기술 검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일부가 깨진 상태에서 전원상실과 외부로 연결된 공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착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안전성 평가가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고 기술 검토를 한 뒤 ‘관막을 허용률을 기존(설계 당시) 8%에서 18%로 높여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만간 영광지역 주민 설명회를 연 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여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앞서 한수원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조기 노후화로 전열관 관막을 교체할 때 당시 정했던 8%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자, 가동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2월 ‘8000여개의 전열관 중 18%까지는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관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한수원의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의 경우 재질이 미국 등 서구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인코넬 600 소재로 만들어져 파손 등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원자력 전문가들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는 조기 노후화로 설계 수명의 절반

수준에서 조기 교체(2018년)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에 ‘부실 검증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운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기계공학 기술사)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지역민, 나아가 국민을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규제기관이 이제라도 제대로 기술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 전문가들 지적대로 기술 보고서에는 누락됐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이 평가절차에 규정된 3가지 조건을 모두 가정하고 안전성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연 뒤 허가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홍이식 전 화순군수 보석 취소 법정구속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 전 화순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홍 전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전 군수는 2011년 4월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조경업자 최모씨와 관공자재 납품업자 박모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의 이번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홍 전 군수가 최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뀐 점과 전달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홍 전 군수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씨에게 받은 자금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모 식당에서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 도착 시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의사 의뢰에 방앗간 주인이 엉터리 경육고·공진단 제조

음식재료 마구잡이 섞어 만들어 한방병원원장 등 55명도 적발

검증된 조제법도 없이 채소 등 음식재료를 마구잡이로 섞어 한약과 보약을 만든 뒤 시중에 유통한 제분소(방앗간)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분소 업주가 만든 효능도 없는 경육고, 공진단, 소화환 등을 저가에 대입해 20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환자에 팔아치운 한방병원 원장과 한의원 원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남부경찰청은 16년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로 제분소 업주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불법 의약품 제조를 도운 나모(53)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의약품 제조를 의뢰한 박모(42)씨 등 한방병원장과 한의원장 등 5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대인동 자신의 제분소에서 TV 등 언론매체에서 접한 건강상식을 바탕으로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광주·전남 45곳을 포함 전국 55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이 만든 공진단, 경육고, 소화환 등을 관절염, 당뇨,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인터넷에서 직접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방병원장 박씨 등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 대신 김씨의 제분소에 의약품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들은 제분소에서 검증된 조제법도 없이 만들어진 공진단과 경육고 등을 100알 단위로 5~10만원씩 주고 사들인 뒤 10~20알 단위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최대 20배 가량의 폭리를 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제분소에서 압수한 한약 환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뢰한 결과 양배추, 청국장 콩, 홍어뼈 등이 주성분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료도 빠져있어 의학적 효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 사육돼지 밀도축 유통 농장주 구속

허기없이 불법으로 사육한 돼지를 밀도축해 유통한 농장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영암경찰청은 22일 허가도 없이 야산에서 돼지 200여마리를 불법으로 사육해 식당 등에 유통시킨 강모(66)씨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영암군 신북면 한 야산 6000㎡(약 1815평)를 임대해 축산 경영허가도 없이 방목 사육한 돼지 50여마리를 불법으로 밀도축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광주 시내 식당

10여곳에서 매달 처리비용으로 1000여만 원을 받고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무항생제 돼지’라고 광고해 마리당 40만~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씨는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냄새로 민원을 제기하자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암암리에 거래한 돼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이홍하씨 불출석 선고 연기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이홍하(76) 서남대 설립자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씨의 불출석으로, 이씨와 관련자들의 선고를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재판부는 재판 직전 이홍하 피고인 측이 이파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서남대와 신경대 전 총장, 교과부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함께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부식된 가로등 방치

22일 오전 광주 서구 유촌동 기아로에서 무진로로 이어지는 도로 부근의 가로등이 구부러진 채 방치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카 때린 초등생 둔기 위협 40대

○...둔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조카를 때린 초등학생을 위협하고 담임 교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22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임모(46)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40분께 완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대형 망치로 천도(10)군을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담임교사 이모(32)씨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조카가 같은 반 학생에게 맞고 왔다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임씨는 경찰에서 “조카의 아버지(임씨의 동생)가 많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데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핫가에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때늦은 후회.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